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0/ 18 통권 164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중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그놈의 집이 웬수(?)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증여세 항목별 설명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토목공사 하고 한전에 무상 제공시, 자기공급재화의 시가가 부가세 과세표준임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청년창업자와 관련된 세금특례들〉

개념, 구분 규정	구체적 조세혜택 내용, 관련 제한조건 등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조의5)	토지 건물제외(창업자금 50억원(10명 이상 고용 100억원) - 5억원)×10% 증여세만 부담 ① 18세 이상 내국인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 ③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 안함 ④ 단, 상속재산에는 선증여재산으로 가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조의6)	세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주식 중(가업자산 상당액 - 10억원)×10%, 과세표준 60억 초과액부터는 20%(한도 부모 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안함 ② 단, 상속재산에는 최종 합산함
가업상속공제적용 (상속·증여세법 18조의2)	세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일반공제 + 특별공제 적용(10년 이상 경영 300억,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① 자산 40% 처분 금지 ② 상속인의 가업종사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세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이익 발생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기업), 50% 감면(창업보육센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근로자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청년창업업종의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간 면제 + 2년간 50% 감면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5호 / 주간 42호

2023. 10. 18.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자와 관련된 세금특례들	표지
C E O 에 세 이	그놈의 집이 왜수(?)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해외법인수출 -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시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증여의제이의 계산방법 개정 연혁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세율	8 9
직장인Survival	인간관계(대인관계) 중심의 직장생활 문화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913, 2022.11.28)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중전주택)을 이전 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 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중전주 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96, 2023.04.19)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올해 결손금 발생한 중소기업에 '지방소득세 환급' 소급 적용"	13
마케팅 Tax consulting	토목공사 하고 한전에 무상 제공시, 자기공급재화의 시가가 부가세 과세표준임	11
세무정보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증여세 항목별 설명	14 23
노무정보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4 42
경영정보	-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43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그놈의 집이 웬수(?)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집값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다. 부동산 대책이란 대책은 다 나온 셈이다. 하지만 서민들 살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결국은 '있는 사람'들만 덕을 더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세사기대란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부동산 거래도 눈치보기 바쁘다. 오늘날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늘 헛돌고 있는 것 같다. '전세난민'이 유행어가 된지 오래다. 전·월세 수요의 핵심이 신혼부부와 젊은이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출산·육아를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저출산 정책을 말하고 있다. 복지에는 딱히 여야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삼포의 원흉은 사실 상 '집'이다.

서민들과 일반 젊은이들은 집이 없을 때 전·월세로 고통을 받는다. 또 빚내서 집을 어렵게 장만하고서도 골치를 썩는다. 그래서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말이 생겼다. 직장은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은 계층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워킹푸어(Working poor)라 한다. 이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쪼들려 사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이 하우스푸어다. 부동산시장이 얼면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그들은 사면초가다.

게다가 모아둔 쌈짓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주저앉은 펀드푸어(Fund poor)까지 겹치면 절망 자체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월가의 금융위기도 사실 불로소득을 노린 미국인들의 집투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래 중국서민들은 집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무슨 집문제냐고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해주던 사회주의 복지제도였던 이른바 '푸리펀팡'(福利分房)이 유명부실해진 탓이다. 연일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는 집을 개인이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하나있는 자식인 샤오황디(小皇帝)에 목을 매는 '자식의 노예 하이누(孩奴)'에 빗대 집 없는 노예라는 뜻의 '팡누'(房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베이징의 중형 아파트 가격은 평균 150만위안(한화 2억5000만원) 내외다. 베이징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인 4만 위안의 37.5년치에 해당한다.

"우리 엄마가 선을 볼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 아파트가 있느냐는 거야. 무조건 있다고 해야 해. 알았지?"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팡누'라는 TV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애인에게 신신당부하는 절절한 장면이다. 반면 '집부자 팡둥(房東)'도 수두룩하다. 베이징 요지에 10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집부자들도 많다. 몇 채가 됐든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늘 그래왔다. 야금야금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으련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6일 (금)	10월 10일 (화)	10월 11일 (수)	10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349.40	1348.30	1348.30	1339.60
일	본	엔	(JPY)	909.08	908.25	907.55	898.97
영	국	파운	(GBP)	1644.92	1650.45	1657.13	1649.92
캐	나	다	(CAD)	984.50	992.02	992.67	985.80
홍	콩	달	(HKD)	172.32	172.22	172.43	171.30
중	국	원	(CNH)	184.31	184.44	185.00	183.68
유	로	화	(EUR)	1423.21	1425.09	1430.28	1423.06
호	주	달	(AUD)	859.64	864.60	867.50	859.69
싱	가	폴	(SGD)	987.16	987.87	989.36	983.23
말	레이	시	(MYR)	285.44	284.93	285.05	283.90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 우선, 해고 예고 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 (퇴직소득) 으로 보나요?
만약 퇴직금으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DC형으로 1년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에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해야하는지와 퇴사한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해야 해도 되는지..
보통 DC 형인 경우 간사로 1년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아니면 직원이 아닌 간사로 지급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A** 1. 해고예고수당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금을 IRP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는 귀사와 퇴직 당사자간에 결
정할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요구하는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외법인수출

- Q** 당사에서 생산하여 해외A국에 납품하는 제품수출을
당사 해외지분투자법인(B)에서 생산해서 해외A국에 납품을 할경우에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우선 해외A국으로 부터 수출대금은 당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경우 폐사는 중간역할만 하는 상품매출로해야할지?
그리고 해외법인 B에 대한 가공비용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요?
- A** 귀사에서 수출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귀사가 직접받지만 수출물품을 해외의투자법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유상사급거래인지 무상사급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B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단순 임가공공역을 제공받는 거래인지, 아니면 B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입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상품매출이 타당하
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으로 회계처리 사항은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시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Q 당사는 현재 수입부가세납부유예를 받고 있는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DDP조건은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수입부가세납부유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

그냥 수입부가세납부유예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수입부가세납부유예는 귀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유예하는 것인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은 귀사가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납부유예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자체를 신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Q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주차료 및 회의실 사용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청구 받습니다.

주차 서비스는 당사 임직원과 손님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서비스를 당사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1장만 작성되고, 적요도 통합하여 '0월 임차료'로 발행됩니다. 주차비 및 기타비용 포함하여 전액 임차료로 잡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주차비용만큼 직원 청구분을 비용에서 제하고, 매입공제도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야 할지?

회계 및 세무적으로 바른 처리에 대해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회사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직원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비용에서도 제외하고, 주차료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에도 회사부담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회계처리 방법입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계에서와는 다르게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키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는 특례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세무상 장기할부판매의 범위

장기할부판매란 자산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는 즉시 자산을 인도하지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불시까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만을 장기할부판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기만 하면 월부로 하든 연부로 하든 그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할부기간은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손익 인식기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

을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한 사업 연도에 매출이익이 전액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명목가치인도기준 원칙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재가치평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로서 판매·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장기할부매출의 손익귀속 시기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장기할부판매	① 원칙 : 인도기준 ② 특례 -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 수용 - 회수기일 도래기준 수용	인도기준 -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평가 적용 -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가능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식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12.1.1.~ 2012.12.31. 개시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times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times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0%	3%
2012.12.31.까지 신고기한 도래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times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times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상동	상동
2014.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도래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times 정상거래비율의 1/2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times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일반기업 : 30% 중소기업 · 중견기업* : 50% * 2017사업연도 부터 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 : 3% 중소기업 · 중견기업 : 10%

화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구분	증여의제시기
2002.12.31. 이전 취득한 경우 → 2003.1.1. 취득 의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 2005.1.1. 증여의제시기
2003.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세율

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주택 외 부동산	50%
			주택·조합원입주권	70%
			분양권	70%
		2년미만	주택 외 부동산	40%
			주택·조합원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이상	주택 외 부동산, 기타자산	기본세율 (6%~45%)
			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6%~45%)
			분양권	60%
	1세대2주택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1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 + 30%)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1600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10만원			2만원		



인간관계(대인관계) 중심의 직장생활 문화

1. 커뮤니케이션

열린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모든 직장에 필수적이지만, 이는 특히 리더에게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동기부여와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는 고객 기반에 비해 고위 경영진에 대한 단어 선택 및 형식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언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갈등 해결

팀이 모든 점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협력하여 작업이 적시에 완료되도록 돕습니다. 반대가 발생하면 개별 관점을 고려하고 각 사람이 듣고 이해한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를 종합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3. 멀티 태스킹

관리자는 매일 해결해야 할 수많은 작업, 질문 및 문제에 직면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경쟁 우선 순위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티태스킹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유연성입니다. 관리자는 직원의 일상적인 작업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직장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4. 협상

강력한 협상 기술은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두 당사자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언어를 청중에게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은 협상에 유용 할 수 있습니다.

5. 조직

조직은 다른 모든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 작업 공간과 워크 플로 프로세스를 고도로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워크 플로우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화된 프로세스가 있을 때만 가능한 여러 시간에 민감한 우선 순위를 처리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913, 2022.11.28

질 의

-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토목공사 하고 한전에 무상 제공시,
자기공급재화의 시가가 부가세 과세표준임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046, 2023.01.31

질 의

- 공동주택 신축사업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송전선로 및 철탑에 대한 지중화공사 협약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체결하고

1. 해당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지중화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업시행자가 지중토목공사, 케이블헤드 및 연결을 위한 가공선로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회 신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지중화 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와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를 요청하고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지중토목공사, 가공선로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한전에 해당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법규기본-6397, 2023.03.16

■ 질 의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조기환급/예정신고/확정신고)로 과세표준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 2023.03.08.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96, 2023.04.19

■ 질 의

- (질의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신축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소유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한 조합원가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 소득령 §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결손금 발생한 중소기업에 '지방소득세 환급' 소급 적용"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 과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해석지침 첫 공개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도록 했다. 다만 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거주지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이 있거나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등의 거점국에서 과세를 제외토록 하는 이중과세 제거의 개념도 담겼다.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그룹 여부, 신고 내용의 적절성 등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문의할 경우 대표 과세당국 또는 영향을 받는 국가 등으로 구성된 리뷰패널이 검토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다자조약문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IF는 지난 7월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필라1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 간 논의로 발효일을 결정한다.

발효일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 가장 빨리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3. 10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1.6% ↑)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1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

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 10. 25. 매일 06:00 ~ 24:00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 1. 1. ~ '23.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 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1.6% ↑)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증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브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플랫폼 사업자 지급 수수료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11. 9.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¹⁾, 모바일 손택스²⁾,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4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당초) 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개선) 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 (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 부당공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투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바,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 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시간: 2023. 10. 25.(수)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10.12	
2		신용카드 매출	23.10.13.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10.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10.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10.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10.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10.12.	
8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10.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10.13.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10.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10.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10.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10.1.	
14		재고납부세액	-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1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10.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10.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10.11.	
2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10.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3.10.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10.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10.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10.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10.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증여세 항목별 설명

— 국세청, 2023. 10

I 기본세율 적용 증여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



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액 6천만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등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40\%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② '①' 외의 경우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times 30\%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①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 (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b)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②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a)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b)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 포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 :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② 공제한도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text{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문화재 자료 등의 가액}}{\text{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II 특례세율 적용 증명

■ 창업자금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합

- 게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III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일반법인*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 *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일반법인 20% ·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 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



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혜법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중견20%)] × [주식보유비율-10%(중견 5%)]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2년 12월 31일
 - 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3년 3월 31일
-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

IV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 *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 증여의제 이익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 정산 사업연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구분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개시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 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정산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2년 12월 31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3년 3월 31일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고용노동부, 2023. 10

I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 '23.10.1. 시행 예정

2 회계공시 목적

- ☞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계공시 대상

- ☞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업종별·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
(예시) 단위노동조합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B지부를 두고 그 아래 C기업 지회를 두는 경우,
C의 상급단체는 A와 B가 됨

** 산하조직은 내부조직(지부·지회·분회 등)을 의미

4 회계공시 방법

(공시내용) 2022년도* 결산정보(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항목 등)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작성('23.10.1. 운영 개시)

- * 위 주소 이외에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labor.moel.go.kr>)를 통해서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 가능
- *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FAQ의 『사용자 매뉴얼』 참고(공시 등록기간 '23.10.1.~11.30.(2개월 간)

5 회계공시 혜택

☞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 '23.10.1. 시행 예정)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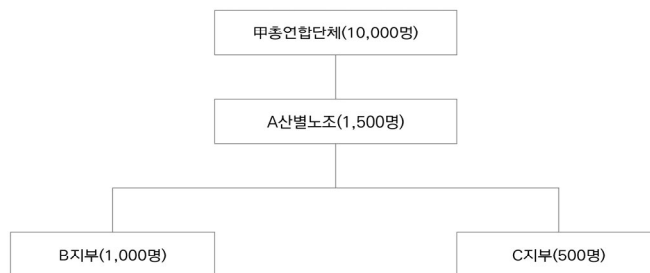
* ①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 ②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결산정보 공시를 전제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여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의 경우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회계공시 범위 예시 >

(예시1) A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였고, A가 산하조직으로 B 지부(1,000명)와 C 지부(500명)를 둔 경우





① 甲, A, B가 공시하면 B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② 甲, A가 공시하면 C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D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예시3)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E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 E의 공시여부에 관계 없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6 회계공시 제도설명·교육 안내

(교육내용) 노동조합 회계 관련 기본 교육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교육방법)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노동조합회계 공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https://youtube.com> 접속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온라인 교육" 검색 ('23.9.25.부터 시청 가능)

** <http://labor.moel.go.kr/pap> 접속 → FAQ 게시판 ('23.10.1.부터 시청 가능)

II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1 노동조합 회계의 의미와 중요성

- 노동조합 회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예금, 상품, 건물, 비품, 채권, 채무 등 각종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계산·정리하여 재정운영 성과, 재무상태 등 결과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노동조합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집행부(임원)는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선출한 대리인으로서 재정 집행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동조합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회계의 구성요소

- 노동조합 회계는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① 재무상태표 : 회계연도 말일 기준의 재무 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 자산 : 현금, 예금, 토지, 건물 등 노동조합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 부채 :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

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② 수지계산서 :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현금의 유입)과 지출(현금의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
 - 조합원은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산·부채 현황과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표준서식은 노동조합의 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작성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 회계 공시항목

가. 회계 구분

- 노동조합이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각 회계별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일반회계 :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정기예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 쟁의기금),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
 - 보조금사업회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
 - 수익사업회계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회계

나.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자산	현금 및 예금	토지	건물	기타자산	부채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 자산 :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 ① 현금 및 예금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액
 - ② 토지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답, 건물부속토지,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



- ③ 건물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 ④ 기타자산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매출채권, 단(장)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임차보증금 등 현금·예금, 토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예 :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미회수분)
 - 단(장)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권(재무상태표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그 외는 "장기"로 분류)
 -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예 : 조합비미수금)
 - 미수수익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예 : 정기에금 미수이자)
 - 선급금 :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 부채 : 매입채무, 단(장)기차입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 총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
 - 단(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년 이내(단기) 또는 1년을 초과하여(장기) 상환될 차입금
 -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 : 비품을 취득한 후 회계연도말 이후 지급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향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
 - 예수금 : 장차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채무로 일단 금전을 받고 그 후 타인 또는 그 타인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채무(예 : 급여 관련 4대 보험료, 원천세)
 - 퇴직급여총당부채 :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 수입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수입 총계	전년도 이월금	조합비	상급 단체 교부금	하부 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수입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입
 - ① 조합비 :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
 - ② 상급단체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
 - ③ 하부조직 부과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 ④ 후원금 :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 ⑤ 타회계 전입금 : 회계 간 전입으로 인한 수입 금액, 지출현황의 "타회계 전출금" 지출금액과 일치
 - ⑥ 보조금 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 ⑦ 수익사업 수입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수입 총액
 - ⑧ 기타 수입 : 수입 중에서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 전년도 이월금 : 회계별로 전기 말 현금 및 예금의 잔액

라. 지출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㉘ 지출 총계 (-㉙+㉚)	㉙당기 지출						
		㉚일반관리비용			㉛사업수행비용			
		㉜인건비	㉝업무추진비	㉞기타운영비	㉟총회 등대회비	㊱조직사업비	㊲정책사업비	㊳교육·홍보사업비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지출현황(계속)								(단위 : 원)
구분	29당기 지출(계속)						45차년도 이월금	
	34사업수행비용(계속)		41상급 단체 부과금	42하부 조직 교부금	43타회계 전출금	44 기타지출		
	39 교섭·쟁의 사업비	40기타 사업비						
㉑ 총계(=㉑+㉒+㉓+㉔+㉕)								
㉑ 일반회계								
㉒ 특별회계								
㉓ 보조금사업회계								
㉔ 수익사업회계								

- 지출 총계 : 당기 지출과 차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지출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출

① 일반관리비용 : 사무국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

- 인건비 :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업무추진비 : 임·직원의 직급·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및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기타운영비 :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사무국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사업수행비용 :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총회 등 대회비 :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사업비 :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 신설확대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정책사업비 :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교육·홍보사업비 :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교섭·쟁의사업비 :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쟁의·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
- 기타사업비 : 사업수행비용 중에서 총회 등 대회비, 조직사업비, 정책사업비, 교육·홍보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③ 상급단체 부과금 :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

단체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④ 하부조직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등

⑤ 타회계 전출금 : 회계 간의 전출로 인한 지출로, 수입현황의 "타회계전입금" 수입금액과 일치

⑥ 기타 지출 : 지출 중에서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상급단체부과금, 하부조직교부금, 타회계전출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수입총계"에서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

마. 점검사항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 + 전년도 이월금

지출 총계 = 당기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예시) 2022년의 현금 유입, 즉 당기 수입이 200만원이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는 당기 수입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5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됩니다.

이때, 2022년의 현금 유출, 즉 당기 지출이 1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 7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600만원은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되고, 지출 총계는 당기 지출 100만원에 차년도 이월금 6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수입 총계 700만원과 금액이 같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차년도 이월금 = 당해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 (예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이는 2021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잔고가 500만원이어야 이를 2022년 1월 1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차년도 이월금이 600만원이라면, 이는 2022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 타회계 전입금 총계 = 타회계 전출금 총계

• (예시) 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만원을 전출한다면, 일반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출금은 1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입금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타회계 전출금과 타회계 전입금이 일치합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2023. 10

오늘(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지원대책 수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전직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 금융감독원, 2023. 10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동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앞으로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②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 ②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 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③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 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ESG 펀드시장도 급성장*해 왔으나,
 - * 공모 ESG 펀드 설정액 추이(조원): ('18년말) 1.0 → ('20년말) 4.4 → ('22년말) 8.2 → ('23.3월말) 8.6
 - 그간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었으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라도 적절한 공시수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 이에 금감원은 '23.3월부터 금투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연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고려한 공시기준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T/F 개요 >

- [참여기관] 금융투자협회, ESG 펀드 수탁고 상위 7개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 [논의사항]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국내 ESG펀드 운용실태 분석, 공시기준 및 공시항목별 기재수준 등 주요 쟁점 검토, T/F 참여회사 대상 Pilot Test 실시 등

II

공시기준 주요 내용

1 증권신고서 사전공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가 공시대상

-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였거나, ②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주요 공시항목별 작성 기준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투자전략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운용능력)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운용인력의 ESG 펀드 운용경력, ESG 평가·분석업무 관련 전담조직·인력의 운영 여부 등

- (투자위험)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 *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와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결과 등이 수익률 등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예>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의 하락이나 환경·사회 이슈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등

- (보수 및 수수료) 외부의 ESG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운용실적)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합니다.
-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가 작성대상

-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펀드로서 개정 공시기준 상 공시대상과 동일합니다.
-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므로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주요 기재 항목 및 작성 기준

- '자산운용보고서'의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현황 등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개정 공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적용대상 및 시행계획

가 적용대상

- 개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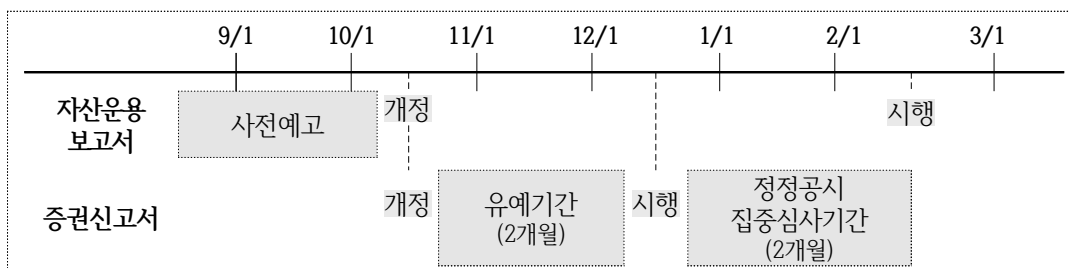
기존 펀드에도 적용됩니다.

- 이는 금번 공시기준의 도입 취지와 ESG 공모펀드가 대부분 추가개방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시행계획

- (증권신고서)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일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23.12월)
 -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정정공시 신고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24.2월)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및 시행시기>



III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계획) 금감원은 개정 공시기준이 원활히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심사기간 중 기존 ESG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2023. 10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동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금 결제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절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여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안)은 행정예고(9.27일~10.12일)를 거쳐 10.18일 시행됩니다.

참 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주요 내용

- ① (1장: 총칙) 목적, 용어 정의, RFI 자격요건*, 적용범위 등
 - * 업종: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
재무건전성: 바젤III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총재가 인정
- ② (2장: 등록) 등록절차 및 당국의 확인·재점검 및 제재 근거
 - (요건)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공여(credit line) 요건 구체화*
*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포함 15개 이상 기관과 약정 체결
 - (절차) 등록시 필요 서류*, 변경·폐지 신고, 당국의 확인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 적정성 재검토 및 보완명령 등 명시
* 예) 연차보고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명세, 본국법령 非저축 확인서류 등
 - (취소)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 ③ (3장: 업무) 업무대상·범위, 업무용 계좌 결제절차 등 명시
 - (대상) 은행간시장 참여자(다른 RFI 포함), 비거주자인 고객
 - (범위) 현물환, FX 스왑 거래
 - (결제) 업무용 외화계좌는 국내·외 관계없이 개설 가능하나, 업무용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하여 자금결제에 활용
- ④ (4장: 의무) 업무상 의무, 의무위탁, RFI에 대한 특례 규정
 - (의무)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및 영업 현황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시 외국환중개회사 경우 의무 부과
 - (위탁) RFI가 의무 수행을 위탁할 ‘대행기관’ 지정 절차 규정
 - (특례) 동일그룹 외은지점(예: JP서울-JP런던) 또는 선도은행 등으로부터의 원화차입 및 외국환중개회사 未경유 직거래 허용
- ⑤ (5장: 건전성 관리) RFI 및 국내은행의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도 관리 방안 규정
- ⑥ (6장: 감독 등) 한국은행에 위탁한 RFI 업무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등